

아베정권 시기의 외교·안보에 대한 여론과 정책

경제희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분석을 통해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에 관한 의식 추이를 파악하고 해당 의식 추이와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과연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이 일본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인지, 일본 시민들의 외교·안보의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경제희(慶濟姬)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및 게이오대 방문연구원.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한국과 일본의 투표행태 및 선거·정당제도 등 주로 민주주의에서의 시민 의식과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代議制民主主義の計量分析』(공저, 2016), 『전후 일본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공저, 2017)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일본 자민당의 집권은 보수적 유권자 결집의 결과인가: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의 일본 유권자의 이데올로기와 정당 선택」(2017),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의 한일비교연구: 17대·18대 대통령선거와 44회·45회 중의원선거를 중심으로」(2014) 등이 있다.

* 본 연구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https://doi.org/10.29154/ILBI.2018.19.372>

일본은 우리와 지경학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 자세하고 다양한 분석이 진행될 것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일본에 대한 논의는 분석 단위를 나누어 진행하기보다 일본이라는 대상을 먼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상으로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일본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다양하지 못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경향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언급되고 있다.¹

특히 최근 여러 연구에서 진행되어 온 아베정권 하의 일본 우경화에 대한 논의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² 관련 연구들은 주로 아베수상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우경적인 언행을 중심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주장하고 그 근거로 일본인의 정치의식 및 역사의식 등을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³ 하지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같은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인과 일반 시민 의식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부 시민 활동을 들어 일본의 우경화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시민 가운데 헤이트 스피치나 재특회 등과 같이 우경화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이 존재하며, 그러한 행동이 일본 사회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이 과연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의식에 반영되는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전반적인 일본 시민 의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우경화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제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영토 및 역사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영토 및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은 관념(ideation)의 영역으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구체화 시키는 행위(behavior) 영역에 속한 안보 인식과는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경화로 표현되는 영토 및

1 국민대일본학연구소편, 『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도서출판 선인, 2006, 6쪽.

2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경제와 사회』 99, 2013, 36~62쪽.

3 이지원, 「일본의 '우경화':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경제와 사회』 101, 2014, 53~86쪽.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시민 의식이 행동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현실 정치에서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인식이 영토 및 역사문제와 같이 이른바 우경화로 표현될 정도의 수준인지, 영토 및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기존 연구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경우,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해당 연구의 주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선택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는 조사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 결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1〉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정치인	시민
역사·영토 관련 의식	A	B
외교·안보 관련 의식	C	D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외교·안보에 대한 일본 시민 의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외교·안보 의식 관련 논의의 대상을 〈표 1〉과 같이 정치인과 유권자로도 대변되는 시민으로 구분하고, 그 개념 및 내용이 다른 역사·영토 관련 의식과 구분하여 A~D 영역 가운데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의식에 해당하는 D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이 조사한 외교·안보 관련 의식을 비교하고 여론조사 실시 방법에 의한 차이를 포함하여 결과 추이를 통해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의식과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간의 관계를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정치인의 행동은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의 전제 하에서 설명한다. 선거에서의 당선이 최우선의 목표인 정치인은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에 가깝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 시기는 우경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던 아베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시기(2012년 12월 26일)부터 최근 5년간(2017년 12월)이다. 이 시기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인식 추이를 고찰하고 그 결과가 아베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과 유사한지 등에 관해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 2절에서는 여론과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후 3절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실증적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 4절에서는 3절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연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인식이 아베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질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해본다.

2. 이론적 검토

1) 여론과 외교·안보 정책

여론이 외교·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 대상의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 민주국가인 미국은 물론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여론의 영향이 외교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하지만 모든 여론이 늘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모든 여론이 균등하게 외교·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 세력 등에 따라 여론의 내용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⁵ 이는 여론이 내포하는 의미를 하나로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론의 주체층은 크게 엘리트층(the elite public), 관심 대중(the attentive public), 일반 대중(the mass public)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주체 층에 따라 그

4 김성한·정한울, 『여론과 미국외교: 부시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EAI, 2005; 천난, 「인터넷 여론이 중국외교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3; 송태은,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와 국제평판: 미국의 세계적 어젠더와 세계여론에 대한 인식」, 『국제정치논총』 57(4), 2017.

5 Cohen, Bernard C. *The Public's Impact on Foreign Policy*. Little & Brown, 1973; 전웅, 「미국 외교정책결정에서 여론이 미치는 영향」, 『東西文化』 9, 2001.

규모, 신뢰도, 전파력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⁶ 과거에는 일반 대중이 무지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여론을 경시하는 경향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선거 결과에 일반 대중 중심의 여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가가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보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여론 가운데 일반 대중 중심의 외교·안보 관련 여론을 살펴보고 과연 그러한 일본 시민의 여론이 아베정권의 외교·안보 정책과 일정 정도 일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확인하기로 한다.

2) 일본의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

여러 매체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는 이른바 과학적 연구로 지칭되기도 하는 현대적 스타일의 여론조사가 일본에 도입된 것은 전후(戰後) GHQ에 의해 서라고 한다.⁷ 일본 민간기관에서 최초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1945년 10월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서 조사한 것으로 지사 선거 방법에 관한 여론조사(「知事公選の方法について」)였다. 이후 진행된 것은 1946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지지정당조사(「支持政党調査」)에 관한 여론조사로 거론된다.⁸ 이후 여러 민간기관에서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공립기관에서도 다채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친근감을 보여주는 척도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는 197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회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시기에 따라 질문 항목이 달라지는데 아시아에 대한 질문이 단독으로 등장한 것은 1977년이다. 하지만 매년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질문이 단독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립기관 중 하나인 NHK 여론조사의 역사는 내각부 여론조사보다 길다. NHK의 여론조사는 1925년부

6 Rosati, Jerel A., *The Politics of U. S. Foreign Policy*. Harcourt Brace, 1993.

7 川島高峰, 「戦後世論調査開始: 占領軍の情報政策と日本政府の調査機関」, 『メディア市研究』, ゆたま書房, 1995.

8 西原重喜, 「日本の世論調査」, 『日本統計学会誌』 21(3), 1992, 283~287쪽.

터 시작되어 매해 정기적 조사와 비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관련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⁹

학계에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외교 관련 여론조사만을 분석하기보다 일본인의 정치 의식을 다루는 가운데 외교·안보 관련 이슈의 영향력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교토부에서 조사된 패널(panel)조사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다양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⁰

특히 국내에서는 유권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지 후보 및 정당을 가르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이데올로기가 투표 향방을 가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¹ 하지만 그러한 원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령 젊은 층의 사회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특히 196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일수록 공산당을 진보적 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미지수이다.¹² 이를 과거의 외교·안보 의식과 연관 지어 보면 이데올로기로 인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의식이 경제의식, 사회의식, 정치의식 가운데

9 NHK 여론조사의 연혁에 관한 내용은 <https://www.nhk.or.jp/bunken/yon/nhk/history.html> (2018년 1월 15일 검색) 참조.

10 三宅一郎·木下富雄·間場寿一, 「政治意識構造論の試み」, 日本政治学会編, 『(年報政治学) 政治意識の理論と調査』, 岩波書店, 1965; 白鳥令, 『日本における保守と革新』, 日本経済新聞社, 1973; 朝日新聞社世論調査室編, 『日本人の政治意識: 朝日新聞世論調査の30年』, 朝日新聞社, 1976; 見田宗介, 『現代社会の社会意識』, 弘文堂, 1979; 堀江湛·富田信男·上条末夫編, 『政治心理学』, 北樹出版, 1980; 三宅一郎, 「『保守-革新』自己イメージと態度空間」, 『同志社法学』 35(4), 1983, 1~58쪽; 小林良彰·村山皓司·谷藤悦司·武重雅文, 『現代政治意識論』, 高文堂, 1984; NHK世論調査部編,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2版)』, 日本放送出版協会, 1985; 三宅一郎, 『政治支持の分析』, 創文社, 1985; 堀江湛·梅村光弘編, 『投票行動と政治意識』, 慶應通信, 1986.

11 田中愛治, 「『五五年体制』崩壊とシステムサポートの継続」, 『レヴァイアサン』 17, 1995, 52~83쪽; 蒲島郁夫·竹中佳彦, 『現代日本人のイデオロギー』, 東京大学出版会, 1996; 平野浩, 「政治的対立軸の認知構造と政党-有権者関係」, 『レヴァイアサン』 35, 2004, 86~110쪽; 蒲島郁夫·竹中佳彦, 『イデオロギー』, 東京大学出版会, 2012; 白崎護, 「有権者のイデオロギーにおよぼす政策争点の重要性和政治信頼の影響」, 『静岡大学法政研』 20(2), 2015, 39~67쪽.

12 遠藤品久·ウィリ·ジョウ, 「若者にととの『保守』と『革新』: 世代で異なる政党間対立」, 『アステイオン』 80, 2014, 149~168쪽; 竹中佳彦, 「保守イデオロギーの影響力低下と年齢」, 『選挙研究』 30(2), 2014, 5~18쪽.

정치의식이라 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외교·안보의식과 관련성이 높았기 때문에 외교안보 관련 의식과 투표 향방과의 관계 역시 약해질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보수화 또는 우경화’의 사실 여부에 대해 실증적인 확인을 시도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치인은 우경화되고 있지만 일본 유권자에 대해서는 우경화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 결과의 주장이다. 가령 정당을 대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정당 공약의 국제 비교를 통해 일본 정당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우경화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중양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중의원선거제도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의 변화로 인해 여러 정당이 보다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데올로기상 정당 공약이 오히려 중양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당의 공약만으로는 정당의 우경화를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인정하고 있다.¹³ 한편으로 선거 출마 후보자 및 국회의원 등 정치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실증연구 결과에서는 정치가의 우경화가 증명되고 있지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우경화를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14 15}

이상의 연구들은 선거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시기 및 그 내용이 대체로 선거와 관계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외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의 아베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유권자로도 표현되는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의식과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谷口尚子・クリス・ウィンクラー, 「世界の中の日本の政党: 政党公約コーディングによる国際比較」, 『2015年度選挙学会発表論文』, 2015.

14 澁谷壮紀・谷口尚子・Chris Whinkler, 「政党マニフェスト・コーディング・データを用いた有権者のイデオロギーに関する国際比較・時系列比較」, 『2015年度選挙学会発表論文』, 2015; 谷口将紀, 「日本における左右対立(2003~2014): 政治家・有権者調査を基に」, 『レヴァイアサン』 57, 2015, 9~24쪽; 竹中佳彦・遠藤晶久・ウィリ・ジョウ, 「有権者の脱イデオロギーと安倍政治」, 『レヴァイアサン』 57, 2015, 25~46쪽.

15 일본인의 이데올로기와 투표행태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회, 「일본 자민당의 집권은 보수적 유권자 결집의 결과인가: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의 일본 유권자의 이데올로기와 정당 선택」, 『일본연구논총』 45, 2017, 91~122쪽 참조.

3. 실증적 논의

국내에서도 일본의 정치인과 시민을 구분하여 시민에 초점을 맞추고 이데올로기 및 집단적 자위권, 헌법개정 등과 관련된 의식에 따라 자민당 지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¹⁶ 하지만 해당 연구 역시 선거에서의 이데올로기 및 외교·안보 인식과 정당지지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로 평상시의 여론과 아베내각 지지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에 실시된 중의원(2014년, 2017년) 및 참의원(2013년, 2016년) 선거 시기를 포함하여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말까지 약 5년간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관련 인식과 아베내각 지지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과연 아베정권 외교·안보 정책의 행보가 전반적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여론조사는 조사방법, 조사시기, 질문 유형 등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포함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기간의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1) 기관별 여론조사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 내에도 수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각 기관 역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의 여러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경우,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발표하는 사례가 드물다. 결과적으로 각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그 조사 및 질문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난다.¹⁷

16 경제회, 「일본 자민당의 집권은 보수적 유권자 결집의 결과인가: 2012년 중의원선거에서의 일본 유권자의 이데올로기와 정당 선택」.

17 <표 2>의 여론조사 횟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에 한한 횟수이다. 오키나와

〈표 2〉 여론조사 기관별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2012년 12월 26일~2017년 12월 31일)¹⁷

국공립기관		민간기관			
정부기관	방송사	방송사		신문사	
내각부	NHK	FNN	ANN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5회	8회	62회	61회	98회	77회
연 1회, 정기적	연 1~2회, 정기·비정기적	월 약 1회, 정기·비정기적		월 약 1~2회, 정기·비정기적	

국공립기관 중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대표적 기관으로 는 내각부(内閣部)와 NHK(Nippon Hoso Kyokai)로 잘 알려진 일본방송협회(日本放送協會)를 들 수 있다.¹⁸ 민간기관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기관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국내에도 잘 알려진 FNN(Fuji News Network)¹⁹, ANN(All-Nippon News Network)²⁰,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예를 들어 여론조사 횟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국공립기관인 내각부와 NHK는 연간 1~2회의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반면²¹, 민간기관은 월 약 1회의 정기적인 여론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추가·실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이후 약 5년간의 여론조사 횟수를 비교해 보면 민간기관 내에서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횟수에 차이가 있고 방송사보다도 신문사에서 더 많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사는 5년간 약 60회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반면 『아사히신문』은 약 100회, 『요미우리신문』은 약 80회 가까이 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및 오사카 등 상황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한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 및 다른 분야와 관련된 여론조사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훨씬 더 많다.

18 일본 외무성(外務省)에서도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무성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그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내각부 조사와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내각부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내각부의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는 197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 ‘후지텔레비전’ 방송국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네트워크이다.

20 ‘테레비아사히’ 방송국을 중심으로 하는 뉴스네트워크이다.

21 NHK도 비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그 횟수가 민간기관보다 현저히 적다.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국공립기관인 내각부 및 NHK의 여론조사 결과와 민간기관 가운데 NHK와 같은 맥락의 방송사에 해당하는 FNN의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관련 의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3〉은 일본의 내각부, NHK, FNN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비록 3개 기관의 여론조사에 불과하지만 조사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내각부의 경우, 조사원이 개별적으로 응답 대상을 면접조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FNN은 모두 전화조사로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 NHK는 조사에 따라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내각부는 매회 3,000명, FNN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NHK 조사는 대상 인원 역시 조사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응답자 수는 회수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각부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60%의 회수율을 기록하여 평균 1,800명 정도의 시민이 조사에 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FNN의 경우, 천명을 넘지 못하는 범위에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내용, 같은 항목의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면접조사의 경우 전화조사보다 긴 조사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화조사 또는 면접조사에 따라 조사 기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더욱이 같은 전화조사라도 조사원이 전화를 하는 방식과 기계방식을 통한 전화조사에서도 그 결과에 차이가 난다. 주된 질문 항목 수에서는 내각부의 조사 항목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부 항목 수를 포함하면 질문 항목 수가 늘어나지만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요 조사 항목이 적은 편이다. 또한 조사 방식의 한계로 인해 면접조사보다는 전화조사의 경우 그 질문 항목이 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FNN의 주요 조사 항목 수 대부분이 NHK 조사보다 적은 편이다.

한편, 각 여론조사의 선택항에서 각각 다른 개별적 내용을 선택하는 항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사의 강약을 표현하는 선택항에 대해서는 척도를 다양하게 책정할 수 있는데, 해당 질문의 척도 구성에 따라 여론조사의

〈표 3〉 기관별 여론조사 방식(2012년 12월 26일~2017년 12월 31일)

	내각부	NHK	FNN
조사 방식	조사원에 의한 개인별 면접조사	조사에 따라 다름 면접조사·전화조사	전화조사
조사 대상 인원	3,000명 일본국적자 (회수 인원에 따라 응답률 변동) 최근 5년간 60% 정도의 응답률	조사에 따라 다름 (회수 인원에 따라 응답률 변동) 일본국적자로 한정하는 경우와 한정하지 않는 경우 혼재	1,000명 (회수 인원에 따라 응답률 변동) 일본국적자로 한정한다는 명기 없음
조사 대상 연령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	선거권자 연령과 동일
조사 기간	약 10일	조사에 따라 다름 3일~약 2주	2일
질문 항목 수 (주요 항목)	6개	조사에 따라 다름	조사에 따라 다름
질문 항목 수 (하부 항목)	조사에 따라 다름	조사에 따라 다름	조사에 따라 다름
선택항	4척도	조사에 따라 다름 (2척도·4척도·5척도)	2척도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특정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와 ‘반대한다’로만 선택항을 마련한다면 2척도로 구성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전적으로 반대한다’로 구성한다면 4척도로 조사하는 것이다. 내각부 조사는 주로 4척도로 구성된 반면, FNN의 조사는 2척도로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NHK 조사는 선택항의 척도 구성 역시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조사에 따라 5척도로 구성된 조사도 적지 않다.²²

전화조사보다는 면접조사가, 조사 대상 인원이 적은 경우보다는 많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보다 정확한 여론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선택항 척도의 구성은 조사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같은 내용에 관한 여론조사라도 조사 방식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할

22 중간에 ‘어느 쪽도 아니다’를 포함시켜 5척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필요가 있다.

〈표 3〉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내각부와 FNN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질문의 길이가 짧은 반면 NHK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그 길이가 길다. NHK의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심층조사가 많기 때문에 상황을 비교적 길게 설명하고 다양한 선택항 가운데 자신의 의사와 가장 가까운 선택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 추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일본의 외교·안보 관련 여론의 추이

일본 내각부, NHK, FNN이 각각 5년간 조사한 내용은 방대하다. 3개 기관의 조사 중 내각부의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그 빈도 및 여론조사 항목 수가 적긴 하지만 5년간의 양을 종합하면 상당한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내각부가 제2차 아베내각 이후 진행한 외교·안보 관련 여론조사의 주요 항목은 6개이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5년간 5회 조사 모두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일본과 제외국 간의 관계, UN에서의 일본의 역할, 대외경제, 일본이 담당해야만 하는 역할에 대한 항목이다. 이 외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회 연속 주요 조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해외에서 위협에 처한 일본인 보호에 대한 항목이 3번 포함되었다. 이 외에 타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주요 항목이 2회, ODA에 관한 내용이 1회 조사되었다. 하부 항목 수 및 내용은 주요 항목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5년간 NHK가 조사한 외교·안보 관련 항목은 모두 헌법과 평화관, 그리고 오키나와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여론조사 항목이 다소 많은 편이지만 각각의 조사가 헌법, 평화관, 오키나와 등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FNN의 여론조사는 거의 매회 다양한 여러 질문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론조사 항목 가운데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 의식을 반영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미국, 중국, 한

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간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안전보장 및 헌법에 대한 의식에 관해,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과 관계된 의식의 추이를 파악하기로 한다. 국가 간 관계 가운데 특히 미일관계 분야에서는 미일동맹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 논의한다.

(1) 국가 간 관계²³

국가 간 관계에 관한 조사에서는 각 조사 기관의 조사 항목 가운데 공통항목을 찾기 어려워 기관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논의한다.

① 미일관계·미일동맹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시민들은 미국과 높은 친근감(80% 전후)을 느끼고 있고 미일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부분 80%대)(〈표 4〉). 특히 아시아에서 미일관계의 중요성을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5% 이상). 이와 함께 미일안전보장에는 미일동맹이 필요하고(약 84%) 미일동맹의 현상 유지 및 강화를 희망하는 비율이 75%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아시아협조와 미일동맹 중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미일동맹보다 아시아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일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방적인 미국과의 협조보다는 아시아와의 협조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는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71%로 미일동맹 등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군사적 행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일본 시민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중의원선거를 통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

23 각각의 표는 다음과 같은 작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첫째, 각 표의 선택항에 ‘어느 쪽도 아니다’, ‘기타’, ‘잘 모름’, ‘무응답’ 등의 비율은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표의 합은 대부분 100이 되지 않는다. 둘째, 각 표에 표기된 시기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기이다. 발표된 시기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간의 차이가 있다. 셋째, 여론 조사가 4척도로 조사된 경우도 2척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가령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편이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조사된 경우 ‘중요’와 ‘비(非)중요’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표 4〉 일본인의 미일관계 및 미일동맹 관련 의식

단위(%)

	내각부						FNN						NHK						FNN			
	미국과의 친근감		미일 관계		아시아에서의 미일 관계 중요성		미일 동맹의 아시아 평화 및 안정에의 영향		일본의 안전 보장에 대한 미일동맹 필요성		자민당 정권 교체와 미일관계		미일동맹강 화방침		미일 동맹의 향배		아시아 협조와 미일동맹			미국의 군사행동 지지		
	친 근	비 친 근	양 호	비 양 호	중 요	비 중 요	그 렇 다	그 렇 지 않 다	필 요	불 필 요	+	-	평 가	비 평 가	강 화 및 현 상 유 지	약 화 및 폐 기	현 재 보 다 아 시 아 협 조	현 상 유 지	현 재 보 다 미 일 동 맹	지 지	비 지 지	
2013년 2월											84.4	5.3	76.5	13.4								
2013년 8월															75.8	13.5	42.2	25.9	19.1			
2013년 9월																				22.1	71.0	
2013년 10월	83.0	15.8	83.9	14.0																		
2014년 4월 (미일정상회담 후)							72.8	15.9														
2014년 7월															76.2	13.6	43.9	32.8	12.8			
2014년 10월	80.5	15.3	79.6	13.4																		
2015년 5월 (미일정상회담 후)													67.2	25.6								
2015년 9월									84.3	9.7												
2016년 1월	84.4	13.6	87.9	9.2	95.9	2.1																
2016년 11월	84.1	13.3	87.1	9.8	95.0	2.5																
2017년 10월	78.5	19.1	84.4	12.5	95.1	2.2																

뤄진 이후 자민당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약 84%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정당은 일본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② 중일관계

다음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표 5〉에 정리하였다. 먼저 일본인이 인식

하는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중일관계 역시 양호하다는 응답이 10%대에 머무는 수준이지만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2013년 10월에는 6%대에 그쳤던 중일관계가 양호하다는 응답이 2017년 10월에는 14.9%로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더욱이 센카쿠열도 문제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염려 및 중국의 군사력으로 인한 일본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느끼는 비율이 70~80%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일관계가 양호하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중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70% 이상). 더욱이 중국의 군사적 활동 활성화에 대한 일본의 대처 방식을 묻은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억제(약 7% 미만) 및 일본 방위력 강화(약 10~14%)에 의한 대처보다 아시아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거

〈표 5〉 일본인의 중일관계 관련 인식

단위(%)

	내각부						FNN						FNN/NHK		NHK			
	중국과의 친 근감		중일관계		아시아에서의 중일관계 중요성		중국 신뢰		중일정상회 담 후 관계 개선		군사적 충돌 염려		군사력에 의한 안전보장 위협		중국 군사적 활동 활성화에 대한 일본의 대처 자세			
	친근	비 친근	양호	비 양호	중요	비 중요	신뢰	비 신뢰	개선 될 것	개선 안 될 것	염려 됨	염려 안 됨	위협 느낌	위협 못 느낌	중일 양국 관계 심화	미국 군사적 억제	일본 방위력 강화	아시아 타국 과의 협력 강화
2013년 2월											82.4	13.5						
2013년 8월															21.3	6.6	13.8	47.2
2013년 10월	18.1	80.7	6.7	91.0														
2014년 2월							8.6	81.0										
2014년 7월															23.1	5.2	9.5	50.0
2014년 10월	14.7	83.0	5.3	84.5														
2014년 11월 (중일정상회담 후)									22.4	73.1								
2016년 1월	14.7	83.2	9.5	85.7	73.4	22.5					74.9	21.9	78.9	16.9				
2016년 11월	16.8	80.6	12.5	82.9	72.9	22.3												
2017년 3월													88.0	10.5				
2017년 10월	18.8	78.4	14.9	79.7	76.8	18.7												

나(약 47~50%) 중일관계를 심화(약 21~23%)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베정권하에서 일본인들은 중국에 대한 위협을 분명히 느끼고 중일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군사적 대응을 선호하는 일본인의 비율은 낮아 보인다.

③ 한일관계

〈표 6〉은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을 정리한 것이다.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중국보다는 높지만 미국보다는 낮다. 주로 30%대의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한일관계가 양호하다는 비율은 그보다 낮아 20%대 비율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룬다. 또한 미국·중국보다는 낮지만 약 69% 정도로 한일관계의

〈표 6〉 일본인의 한일관계 관련 의식

단위(%)

	내각부						FNN						NHK	
	한국과의 친근감		한일관계 (FNN)		아시아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		한국 신뢰		한일정상회담 후 관계 개선		관계 개선 전망		독도문제로 인한 안전보장 위협	
	친근	비 친근	양호	비 양호	중요	비 중요	신뢰	비 신뢰	개선 될 것	개선 안 될 것	개선 될 것	개선 안 될 것	위협 느낌	위협 못 느낌
2013년 10월	40.7	58.1	21.2	76.0										
2013년 11월							16.8	69.3						
2014년 2월							29.9	56.1						
2014년 3월 (한일정상회담 후)									19.1	73.7				
2014년 10월	31.5	66.4	12.1	78.2										
2015년 6월			16.7	79.2							34.1	59.1		
2016년 1월	33.0	64.7	22.6	73.1	69.8	26.0								
2016년 11월	38.1	59.0	29.2	65.4	69.0	26.5								
2017년 3월													87.8	9.7
2017년 10월	37.6	59.7	26.8	67.7	69.1	26.4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독도문제로 인한 군사적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즉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비율이 약 90%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한일 관계 개선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비율이 약 74%로 높게 조사되었다. 하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처럼 한국의 군사적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식에 관한 여론조사 항목은 발견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한일 간의 군사적 충돌까지 염려하는 경우는 희박한 것으로 유추된다.

(2) 안전보장·평화

일본의 안전보장 및 평화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먼저 내각부의 경우, 안전보장 및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을 묻지 않지만 UN평화유지 활동 및 안보리 상임이사국 활동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일본인이 생각하는 평화 공헌 등에 관한 생각을 묻고 있다(표 7). UN평화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일본인의 비율이 활동 참가에 반대하거나 보다 소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대부분 80%대:10%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세계평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군사 활동에 참가해야 하거나 일본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평화에 공헌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실적으로 군사적 활동을 전개하거나 헌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적극적 평화주의에 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표 7).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70~80%대의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으나 이에 기반한 무기수출3원칙 완화에 관해서는 반대(약 59%) 의견이 찬성(약 28%) 의견의 2배를 넘는다.

일본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안전보장 체제로 일본의 평화가 지속해서 유지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보다 어느 쪽도 아님, 즉 예측

〈표 7〉 일본인의 안전보장 및 평화 관련 의식(1)

단위(%)

	내각부								FNN			
	UN평화유지 활동 참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활동		상임이사국 찬성 이유		상임이사국 반대 이유		적극적 평화주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보다 적극적 참가 및 현상 유지	보다 소극적 참가 및 참가 반대	찬성	반대	세계 평화 구축에 적극적 참가	비핵 보유국· 평화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일본이 세계평화에 공헌	UN의 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해야함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필요	지지	비지지	찬성	반대
2013년 10월	83.7	12.3	82.2	7.8	27.5	25.3	34.5	7.6				
2014년 1월									82.7	12.0	28.3	59.4
2014년 2월									74.5	19.4		
2014년 3월									75.4	18.0		
2014년 10월	81.0	13.2	75.7	9.4	27.5	23.7	30.0	5.3				
2016년 1월	81.0	13.5	77.0	10.6	28.2	24.1	39.3	8.9				
2016년 11월	73.5	21.9	75.9	10.4	28.4	23.4	35.3	6.4				
2017년 10월	80.1	15.3	77.5	8.4	27.4	27.1	27.8	9.9				

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반 이상이였다(〈표 8〉). 이러한 가운데 세계 정세상 일본이 전쟁이나 분쟁에 휩쓸리거나 타국으로부터 침략받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70% 전후의 높은 응답자가 위험을 느끼고 있으나 만일 우발적으로 전투에 휩쓸리게 될 경우 즉각 반격해야 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하였다. 철저히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높았고 무력 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약 31%로, 만일 전쟁 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직접 무력을 사용한 반격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본이 평화 수호를 위해서는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외교(53.4%) 및 민간 레벨의 경제적·문화적 교류(26%)가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무력 배경의 억지력(9.4%)이 필요하다는 견해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편, 최근 일본에 대한 우경화에 대한 논의, 즉 외교 및 안전보장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이 변화하고 그중 보수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약

〈표 8〉 일본인의 안전보장 및 평화 관련 의식(2)

단위(%)

NHK																		
현재의 안전보장 체제로 미래에도 일본의 평화 유지		세계정세 상 일본이 전쟁 및 분쟁에 휩쓸리거나 타국에 의해 침략 받을 위험성		우발적으로 전투에 휩쓸릴 경우 일본의 대처			일본의 평화 수호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일본의 평화 수호 위해 일본의 입장을 어필하는 중요 방법				전후 안전보장 및 외교에 대한 일본인 의식 변화		최근 안전보장 및 외교에 대한 일본인 의식이 보수화 된다는 생각		
지속	비 지속	위험	비 위험	즉각 반격	철저히 방어	무력 사용 없이 대응	무력 배경의 역지력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외교	민간 레벨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전쟁 포기를 원한 다고 세계에 주장	방위력 강화	평화 유지 활동으로 세계에 공헌	경제 등 교류로 세계 각국과 관계 강화	변화	무 변화	보수화 되어 걱정	보수화 경향은 있지만 문제 없음	보수화 되지 않았음
2013년 8월	20.5	22.5	68.8	26.7	13.0	45.0	31.2							64.7	24.8	25.9	38.0	23.6
2014년 7월			72.9	20.9				9.4	53.4	26.0	27.0	12.5	21.1	26.8				

65%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약 60% 넘게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우려를 느끼는 비율은 약 26%로 전체 일본 시민들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염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항목이 다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NHK와 FNN의 여론조사에 한해 논의한다.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 관련 의식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여론조사가 겹치는 항목이 많다. 조사기관의 출처는 각 표 왼쪽에 N 또는 F로 표기하였다. N은 NHK이고 F는 FNN이다. FNN의 모든 조사는 전화조사인 반면 NHK는 조사에 따라 전화조사와 면접조사가 혼재되어 있어 면접조사인 경우에만 ‘N면’으로 표기하였다.

먼저 헌법개정에 대해 NHK는 그 필요성에 관해 물은 반면, FNN은 찬반 의견을 질문하였다. NHK와 FNN의 조사 결과에서 방향성은 유사하지

만 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필요성과 찬반을 묻은 질문 항목 및 조사 방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9〉는 헌법개정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직후 헌법개정에 대해 찬성 의견이 60%를 넘는 높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점차 낮아져 2015년 7월에는 약 38%로 감소하였다. NHK의 조사 결과는 이보다 더 낮아 2016년 4월에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24%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최근 다시 상승하면서 약 50%대(FNN), 약 40%대(NHK)의 헌법개정 찬성·필요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헌법개정에 대한 찬성 및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난 2014년에는 4월 무기수출 3원칙 완화에 대한 각의 결정이 있었고, 7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진행되었으며, 12월에는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여 참의원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된 시기였다. 상대적으로 제2차 아베내각 시기 가운데 다른 시기보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아베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 구체화된 시기에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이 그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정부와 일본 시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각 지지와의 관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기별 여론조사에 따라 선택 항목에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헌법 제정 이후 약 70년이 지난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 이상이었으며 한편으로 안전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쟁 포기를 규정하는 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헌법 중에서도 특히 헌법9조에 관해 자세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표 10〉). 먼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의 역할에 대해서는 70%가 넘는 높은 비율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헌법9조 개정에 대한 찬반·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20%대의 찬성에 머무르는 정도이고 높은 경우에도 30%대 정도이다. 반대 및 불필요하다는 의견

〈표 9〉 일본인의 헌법개정 · 자위대 · 집단적 자위권 관련 의식(1)

단위(%)

		헌법개정 (N)필요성 · (F)찬반		개정 필요 이유						개정 불필요 이유						
		필요 (찬성)	불 필요 (반대)	미국의 강압에 의한 헌법	프라이 버시 권리 및 환경권 등 새로운 권리 명기	국가자 위권 및 자위대 존재 명기	국제 사회에 서의 역할을 위해	시대 변화에 대응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 변화에 대응	현재 헌법이 좋은 헌법	헌 헌법에 다소 문제는 있으나 개정할 정도는 아님	이미 국민 가운데 정착	헌법의 해석 및 운용의 폭을 정하지 않으면 됨	전쟁 포기를 규정 하는 헌법 9조 수호	아시아 각국 등 국제 관계 에서 손해	기본적 인권이 지켜 지고 있어서
F	2013년 4월	61.3	26.4													
N	2013년 4월	41.6	16.0	8.6			15.0	75.4		7.3	35.5			52.5		
F	2013년 5월	56.3	31.5													
F	2013년 6월	52.2	38.1													
F	2013년 7월	52.2	34.8													
F	2013년 8월	49.3	37.9													
F	2013년 9월	52.4	36.4													
F	2014년 1월	44.3	42.2													
F	2014년 2월	49.5	36.8													
F	2014년 3월	38.8	47.0													
N	2014년 4월	28.4	26.2	7.0			15.0	75.3		6.9	30.8			60.1		
F	2015년 4월	40.8	47.8													
N	2015년 5월	27.7	24.6	6.1			11.7	79.8		9.2	19.9			67.3		
F	2015년 7월	37.6	54.1													
F	2016년 3월	41.3	47.3													
F	2016년 4월	45.5	45.5													
N	2016년 4월	27.3	30.5	8.4	8.4	20.4			54.6			11.0	9.7	69.6		
F	2016년 6월	43.3	45.5													
F	2016년 7월	42.3	41.7													
F	2016년 11월	55.7	37.2													
N면	2017년 3월	42.5	34.4	11.7	15.6	14.7			53.5			22.7		51.3	2.8	20.9
F	2017년 4월	52.9	39.5													
F	2017년 5월	49.8	44.0													
F	2017년 6월	55.4	37.5													
F	2017년 12월	53.6	39.6													

〈표 10〉 일본인의 헌법개정 · 자위대 · 집단적 자위권 관련 의식(2)

단위(%)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9조 역할 평가		헌법9조 개정 (N)필요성 (F)찬반		개정 필요 이유					개정 불필요 이유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96조의 전의원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 완화		헌법개정을 바라는 의원(정당)이 2/3 이상 점유	
		평가	비평가	필요 (찬성)	불필요 (반대)	자위력보유를 헌법에 명기	UN 중심의 군사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UN 의 평화유지활동 등에 좀더 적극적으로 공헌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자위대도 포함한 군사력 포기 명기	해외에서의 무력행사 저지위해	아시아 각국 등 국제관계에서 손해	평화헌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문	개정 안 해도 헌법해석으로 변경대응 가능	찬성	반대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음
F	2013년 1월														35.3	49.8		
F	2013년 2월														44.6	44.4		
F	2013년 4월														42.1	44.7	54.8	31.3
N	2013년 4월	76.3	17.1	33.1	29.9	46.9	31.6		8.6	7.1	8.5	6.8	66.0	15.9	25.6	23.8		
F	2013년 5월														32.3	52.0	54.6	32.8
F	2013년 6월																53.9	36.2
F	2013년 7월(1)														32.7	53.7	45.0	39.9
F	2013년 7월(2)																49.9	36.1
F	2013년 8월														30.6	57.2		
N	2014년 4월	74.8	15.2	23.1	38.4	40.8	34.9		7.8	8.4	10.7	5.5	67.6	13.5	18.1	30.4		
N	2014년 7월	76.5	16.0															
N	2015년 5월			22.1	38.4	43.7	24.8		8.2	14.9	13.3	6.0	64.8	13.3				
F	2015년 7월			33.5	59.5													
F	2016년 1월																32.7	58.3
F	2016년 2월																40.9	49.8
F	2016년 4월																48.0	41.6
N	2016년 4월	75.8	16.2	22.1	39.8	55.1	22.6		5.4	10.1	12.4	3.5	65.0	15.0				
F	2016년 5월																44.0	45.9
F	2016년 6월																40.3	48.4
F	2016년 7월																43.8	47.1
N면	2017년 3월	82.0	13.4	25.4	57.2	56.5		23.7	7.3	8.0	22.4	5.1	58.4	11.3				

역시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근 반대 의견이 많아져 2015년 7월과 2017년 3월에는 60%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헌법9조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자위력 및 자위대 등 군사력 보유의 헌법 명기 등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고 반대로 불필요한 이유로는 무력 저지 및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헌법9조를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헌법해석 변경으로 대응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10%를 넘어, 단순히 헌법9조 개정에 반대하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고 답한다고 해서 모두 무력 행사 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알 수 있었다.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96조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원 수를 전(全) 의원 2/3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최근에 반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개정을 바라는 의원(정당)이 의회 2/3 이상을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차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의견보다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의견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시기에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아베정권이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의견을 피력한 시민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각 지지율과의 관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역시 제2차 아베내각 초창기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으나 점차 그 비율이 줄어들고 오히려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질렀다(2014년 4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론 역시 질문 방식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단순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하느냐의 여부를 묻은 질문보다 동맹국이 공격받고 그에 따라 일본의 안전도 위협당할 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하느냐로 설명하고 질문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보다 인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역시 집단적 자위권 행

〈표 11〉 일본인의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 관련 의식(3)

단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동맹국 공격 및 일본 안전 위협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 이유				불인정 이유			
		(N) 헌법 개정 및 헌법 해석 변경 하여 인정 /(F) 인정	(N) 행사 및 집단 적자 위권 자체 불인정 /(F)불 인정	인정 /평가 (2014년 7월 이후 각의 결정 이후)	불 인정 /비평 가	전적 으로 행사	최소한 행사	일본 방위	동맹국 관계 유지	권리는 있으 면서 행사 못하는 것이 이상함	안전 보장 관련 국제적 활동에 필요	정부의 헌법 해석과 모순	타국의 전쟁에 휩쓸 리고 싶지 않음	주변 국을 불안 하게 할 수 있음	행사 안해도 후방 지원 활동 등 공헌 가능
N	2013년 4월	47.9	25.9												
F	2013년 8월	45.4	38.2												
F	2014년 1월	43.9	35.7												
F	2014년 2월			47.4	38.1										
F	2014년 3월			42.4	41.5										
F	2014년 4월				25.5	7.3	64.1								
N	2014년 4월	33.1	41.5					29.9	17.2	12.1	38.3	5.3	33.5	15.4	41.6
F	2014년 5월				28.1	10.5	59.4								
F	2014년 6월				33.3	11.1	52.6								
F	2014년 7월			35.3	56.0										

사 용인에 대한 각의 결정이 진행된 이후 조사된 2014년 7월 조사 결과에 서는 이전에 비해 인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낮아졌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 율이 이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높아졌다. 아베내각의 실질적인 법적 움직임 이 진행된 경우 오히려 정부와 반대 방향의 의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표 12〉를 통해 알아본다.

〈표 11〉에서 나타났듯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각의 결정이 정해지기 전에는 비교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으나 정작 아베내각에서 집 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진행되자 그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 해가 54%로 높게 나타났다(〈표 12〉). 그 이후 약간의 차יי이긴 하지만 집단 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나(2015

〈표 12〉 일본인의 헌법개정 · 자위대 · 집단적 자위권 관련 의식(4)

단위(%)

		아베내각의 헌법해석 변경 및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각의결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찬반 (2017년 3월 조사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 히 설명)		국회에서 안전보장관련 법안 성립 (전/후2015년 9월)찬/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인해 일본의 전쟁 및 분쟁에 휩싸일 위험			앞으로의 자위대 항배			자위대가 수행해야 할 역할		
		평가	비 평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증대	감소	변화 무	증강	현상 유지	축소	자국 방어	평화 유지 활동 처럼 무력을 동반 하지 않는 공헌	미군 등의 우호국 군대에 무력 행사를 포함한 협조
N	2013년 8월										29.6	54.8	6.3			
N	2014년 7월	37.6	54.0					43.7	11.0	36.6	22.8	60.5	8.1	21.0	58.6	10.4
F	2015년 4월					36.2	49.5									
F	2015년 5월					31.7	57.7									
N	2015년 5월			21.9	29.5											
F	2015년 6월					31.7	58.9									
F	2015년 7월					29.0	63.4									
F	2015년 9월 (안전보장 관련 법안 성립 후)					32.4	59.9									
N	2016년 4월			25.0	27.2											
N면	2017년 3월			61.1	32.7											

년 5월, 2016년 4월 조사) 2017년 3월에는 다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베정권 중에 국회에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성립되는 또는 된 것에 대해 적게는 50% 가까이, 많게는 약 6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인정됨으로써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는 의견이 약 44%로, 오히려 감소(11%)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약 37%)으로 판단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또한 자위대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는 자국을 방어(21%)하거나 무력행사에 협조(약 10%)하기보다는 평

화유지 활동처럼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공헌(약 59%)의 역할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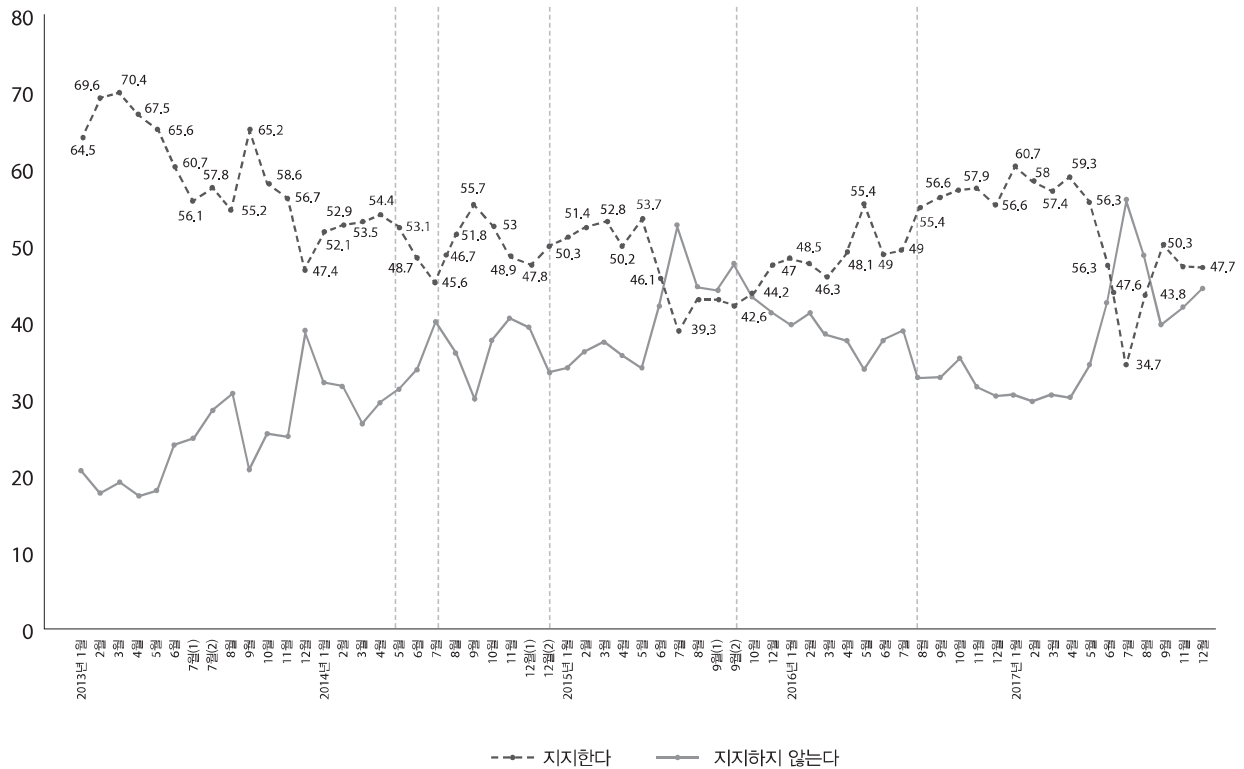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초기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반대 의견보다 높았으나 실제로 각의 결정이 진행되거나 법안이 성립된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이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더욱이 자위권 행사 결정이 용인됨으로써 전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 향후 자위대의 역할에 대해서도 무력행사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내각지지율과 몇 가지 주요 여론의 추이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3)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 관련 여론과 내각지지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 항목 및 조사 방식에 따라 여론조사의 결과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다루는 내각지지율과 여론 간의 관계는 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26일 이후 2017년 12월까지의 아베내각 지지율은 <그림 1>과 같다. FNN은 매월 아베내각의 지지율을 조사해 오고 있는데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어느 쪽도 아니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만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2012년 출범 이후 아베내각의 지지율은 2013년 3월 70.4%를 기록하는 등 초창기에 높은 지지율을 얻었으나 점차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그림 1>과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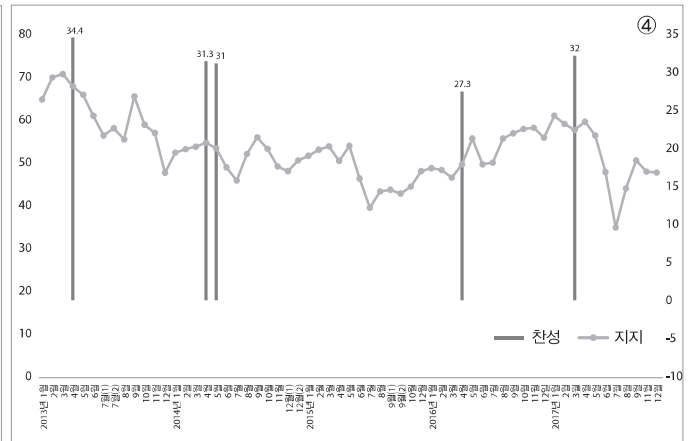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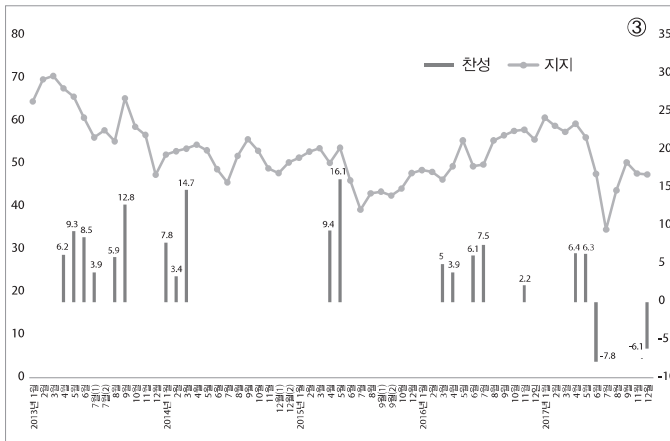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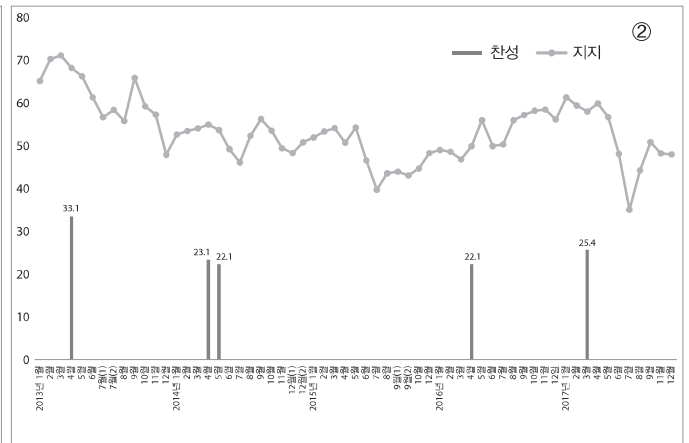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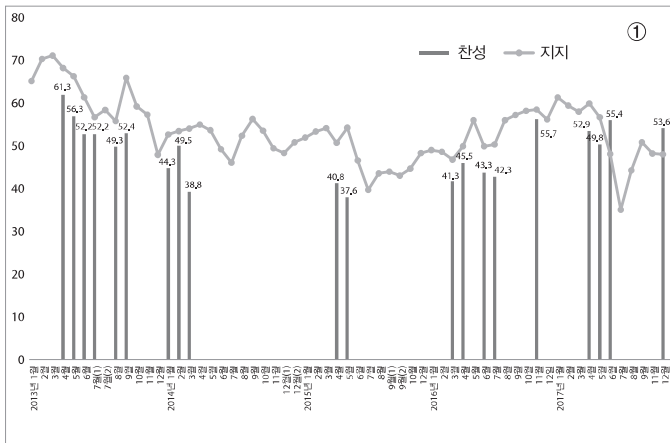
<그림 1> 중간에 표시된 세로 점선은 헌법 관련 주요 사항이 발생한 직후 조사를 표시한 선이다. 먼저 2014년 4월에는 무기3원칙 완화에 대한 각의 결정이 있었고, 2014년 7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이 있었으며, 2014년 12월과 2016년 7월은 각각 중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에서 여당이 2/3 이상을 점유하게 된 시기이고, 2015년 9월에는 안전보장관련법이 성립되었다. 각 해당 달의 내각지지율과 그 전달과의 차이를 살



〈그림 1〉 아베내각 지지율(2013년 1월~2017년 12월)(%)

펴보면 각각 2014년 4월 0.9%p, 2014년 7월 -3.3%p, 2014년 12월 2.5%p, 2015년 9월 -0.9%p, 2016년 7월 0.4%p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헌법 관련 주요 움직임이 발생하여도 내각지지율에 크게 변화는 없으며 더욱이 상승한 경우와 하강한 경우가 혼재되어 있고 그 폭도 최대 3.3에서 최소 0.4로 변화폭도 비교적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 헌법 관련 정부 및 여당의 움직임은 내각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여론과 내각지지율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헌법개정 및 헌법9조 개정에 대한 찬반·필요성 조사는 내각지지율 처럼 매달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교한다.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FNN, 헌법9조 개정에 대해서는 NHK의 조사 결과로 그 차이를 논의한다. 〈그림 2〉와 〈그림 3〉은 각각 내각지지율과 헌법개정·헌법9조 개정에 대한 찬성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헌법개정과 헌법9조 개정 모두 대체로 내각지지율보다 개정에



- ① <그림 2> 아베내각 지지율과 헌법개정 찬성 비율(%)
 ② <그림 3> 아베내각 지지율과 헌법9조 개정 찬성 비율(%)
 ③ <그림 4> 아베내각 지지율과 헌법 찬성 비율 간의 차이
 ④ <그림 5> 아베내각 지지율과 헌법9조 개정 찬성 비율 간의 차이

찬성하는 비율이 낮는데 헌법개정의 경우 개정 찬성률이 아베내각의 지지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2017년 6월, 12월).

양쪽 모두 매월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 2>와 <그림 3>만으로는 각각의 찬성률과 내각지지율의 차이 및 변화가 어떠한지 쉽게 파악할 수 없다. 이를 보다 쉽게 나타내기 위해 내각지지율에서 각각의 개정 찬성률의 차이를 구한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그림 4>와 <그림 5>이다. <그림 4>와 <그림 5>의 꺾은 선 그래프는 내각지지율을 표시한 것이고 왼쪽 축은 내각지지율의 범위를 나타낸 축으로 <그림 2>와 <그림 3>의 기준과 동일하다. 한편, <그림 4>와 <그림 5>의 오른쪽 축은 내각지지율에서 각각의 찬성률을 뺀 수치를 의미하는 축으로 그 범위가 -10부터 35까지

지에 해당된다.²⁴ 각각의 막대그래프의 길이가 짧을수록 지지율과의 차이가 적으며 주변 막대그래프의 길이가 비슷할수록 내각지지율과 찬성률 차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그림 4>의 헌법개정의 경우, -7.8에서 16.1까지 다양한 분포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각 조사 결과의 차이 변화가 비교적 심하게 나타난다. 이는 헌법개정과 내각지지율 간의 변화 움직임이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헌법개정의 찬성률로 내각지지율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그림 5>의 내각지지율과 헌법9조 개정 찬성률과의 차이는 27.3에서 34.4로 각각 조사 결과 간 변화의 차이가 비교적 작다. 하지만 막대그래프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내각지지율과 찬성률의 차이가 크다는 뜻으로 대부분 20%대를 기록한 헌법9조 개정 찬성률이 내각지지율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아베내각의 지지율 변화와 일본 시민의 외교 및 안보 의식 간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인식을 자세히 분석하고 과연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이 일본 시민의 지지에 의해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관계, 안전보장 및 평화,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 분야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미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시아와의 협조를 미일동맹보다 우선시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친밀감이 낮고 군사적 충돌을 염려하는 여론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선호하지 않는 시민이

24 헌법개정과 헌법9조 개정이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두 그림의 오른쪽 축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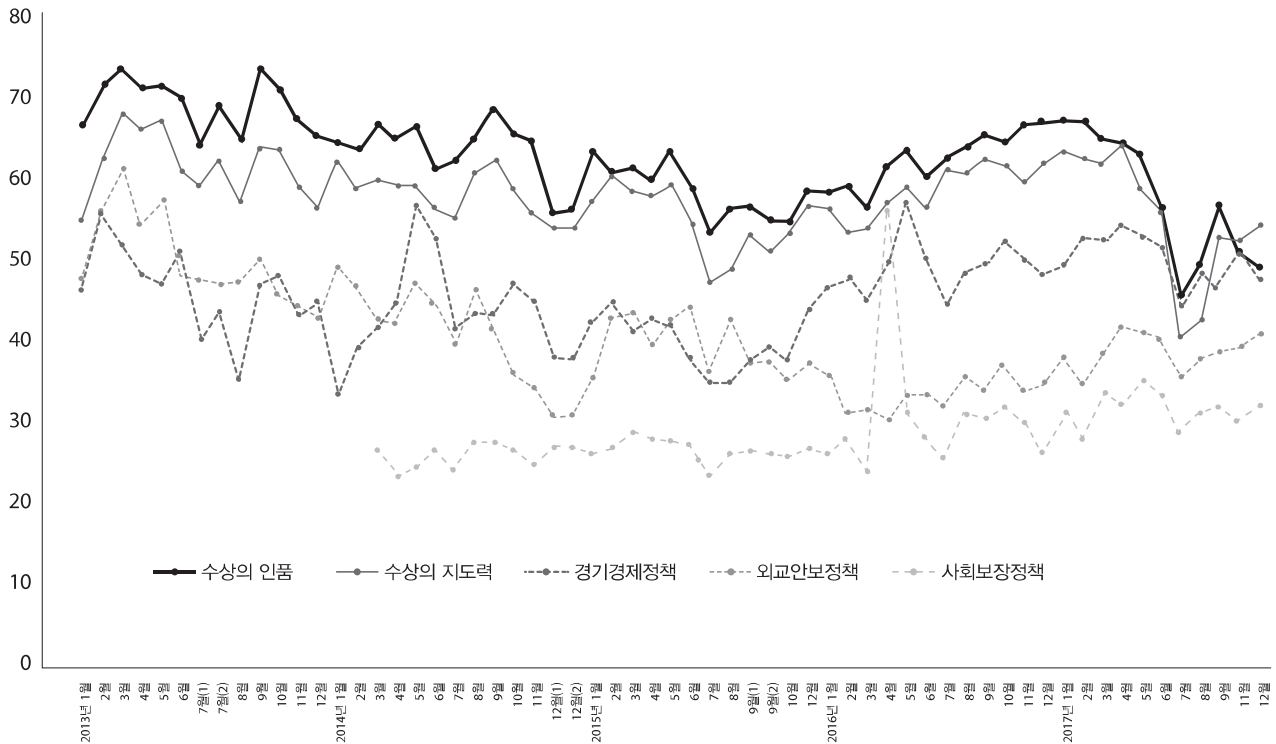
많았다. 더욱이 제2차 아베내각이 들어선 이후 점차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보장과 평화 면에서도 평화를 희망하지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 거래 등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우경화 논란의 중심이 되는 헌법개정·자위대·집단적 자위권 가운데 헌법개정을 원하는 일본 시민과 반대하는 일본 시민의 비율은 50% 전후에서 그 수치가 상호 교차를 반복하는 수준이다.

헌법개정을 찬성하는 의견에는 외부에서 염려하는 자위대 및 자위권의 명시화를 희망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헌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 가운데에는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9조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헌법9조 개정에 대한 찬반·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20~30% 정도가 찬성 및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고, 헌법개정 절차(헌법96조)에 관하여 전의원 2/3 이상 찬성 조항의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찬성한 결과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30%대의 찬성에 머물렀다. 더욱이 헌법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들이 결정되었던 시기에 내각지지율이 상승하거나 혹은 그 상승폭이 커지거나 하는 경향을 찾을 수 없었고, 해당 시기와 내각지지율 간의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아 자위대 및 자위권을 포함한 헌법개정 관련 의식이 내각지지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설명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을 상품으로, 유권자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 본다면²⁵ 여론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할 수 없지만 이상의 논의로 볼 때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의 행보는 대다수의 일본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합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일본 시민의 여론이 아베정권의 정책 방향과 비교적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이상 비교적 안정적

25 Downs ·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 Row, 1953.



〈그림 6〉 아베내각의 평가(%)

인 아베내각 지지율이 유지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으로 4가지 요인이 비교적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꾸준히 유지되는 아베수상에 대한 개인적 인기, 외교·안보 관련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 및 기대, 낮은 투표율과 평균 30~40%의 자민당 득표율,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위한 정당 선호 등으로 인해 외교·안보 여론이 정부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 않아도 내각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FNN이 조사한 아베내각 평가를 살펴보면 아베수상의 개인적 인기가 주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은 FNN이 매월 조사한 아베내각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정리한 그림이다. 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굵은 실선은 아베수상의 인품에 대한 평가로 2017년 하반기에 40%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거의 대부분 50%를 넘는 높은 평가를 유지해 왔다. 그 다음의 평가가 얇은 실선으로 표시한 수상의 지도력으로 수상

의 인품과 지도력이라는 개인적 인기가 높게 유지된 것이 아베내각의 지지율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하단 2개의 점선은 경기·경제정책과 사회보장정책(2014년 2월경부터 시작된 점선)에 대한 평가이다. 또한 중간 실선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도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도 낮지만 경기·경제 정책 및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보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내각의 안정된 내각지지율이 유지된 원인에는 아베수상의 개인적 인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원인은 일본 시민이 선거 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및 아베정권에 기대하는 항목 가운데 외교·안보정책의 중요도 및 기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13>과 <표 14>는 FNN이 표시된 달에 조사한 선거 시의 주요 판단 기준 및 아베정권에 대한 기대 정책을 정리한 표이다. 일본 시민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베정권에 비교적 높

<표 13> 선거에서 정당 선택 판단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경기 대책	연금 및 의료 등 사회 보장 개혁	재해 복원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정책 개선	양육 및 교육 정책	소비세 인상	지방 분권	외교· 안보	헌법 개정	TPP 교섭
2013년 6월	32.1	27.1	5.1	5.5	6.5	2.9	0.7	7.6	5.1	1.7
2013년 7월(1)	36.1	22.7	3.2	7.6	6.8	3.8	0.4	6.9	5.4	2.6
2013년 7월(2)	32.0	17.1	—	7.9	—	5.6	—	4.2	8.8	2.8
2014년 11월	33.1	25.5	3.0	6.4	6.9	2.9	0.8	6.8	3.5	1.2
2014년 12월	31.1	25.7	2.7	6.1	8.7	3	0.9	8.2	3.5	0.8

<표 14> 아베정권에 가장 기대하는 정책(%)

	경기대책	연금 및 의료 등 사회보장 개혁	재정 재건	재해 복원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정책 개선	외교· 안보	납치·핵 등 북한 문제	헌법 개정
2012년 12월	40.3	12.5	10.5	7.5	4.8	3.4	2.2	2.1
2014년 9월	23.2	26.0	4.4	5.4	3.3	11.0	3.7	1.4

게 기대하는 정책은 경제 및 사회보장 관련 정책으로 외교·안보, 헌법개정, TPP교섭 등에 대한 중요도 및 기대도는 경제 및 사회보장과 비교해 낮게 나타난다.

일본 내 언론이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다루는 뉴스의 양이 많고 방출하는 빈도도 높아 일본 시민이 외교·안보 이슈에 상당히 관심이 높고 아베정권 선택 및 지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제 및 사회보장 이슈에 비해 그 관심 및 기대가 낮은 경향이 있다.²⁶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여론 중에 외교·안보 관련 여론이 아베정권의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어도 내각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근 일본의 중의원 및 참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자민당 의원의 득표율은 의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30~40%대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대략적으로 투표율(50%)와 득표율(40%)을 곱하면 20%로 자민당 후보가 얻는 유권자의 지지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20%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낮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 시민의 여론보다는 자민당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자로 불리는 강한 지지 세력이 바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쪽이 선거 당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시민은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당을 선호한다고 보인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일본 시민이 최근 일본에 존재하는 정당 가운데 자민당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정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그 정책 방향이 시민의 뜻과는 달라도 더 나은 대안이 없는 이상 외교·안보정책으로 인해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가 쉽게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26 경제회, 「일본 정치에서의 북한 쟁점: 선거 및 내각지지율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9(2), 2009, 157~179쪽.

본 연구는 각 여론조사의 원(raw)데이터가 아닌 결과만을 대상으로 그 추이를 보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외교·안보 인식과 내각지지율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가와 시민을 구분하고 역사 및 영토 이슈와 외교 및 안보 이슈를 엄격히 구분하여 세밀한 분석 단위에서 일본 시민의 관련 의식 추이를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그 결과를 자세히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기관을 불문하고 역사 및 영토 이슈에 대한 일본 시민 의식은 대부분 우경화로 판단할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관념적인 의식과 이를 행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는 외교·안보 의식은 구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경화 경향을 부정할 수 없는 정치가와 일본의 시민을 구분하고 외교·안보의식을 역사 및 영토 인식과 별개로 일본 시민의식을 살펴보았다. 제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이후 일본 시민의 외교·안보의식은 오히려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추진 방향과 다른 방향을 나타내었다. 여론이란 쉽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소한 최근 아베정권의 외교·안보적 행보가 일본 시민 대부분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